

“尹정부, 에너지 이념화해”

민주 신영대 의원, “원전 안전 문제 정치적으로 이용 태양광 운영 실태 조사, 작년 9월 조사 결과 최근 발표” 새만금 관련 “국내 유일 RE100단지… 기업 선택 여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26일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를 전북에서 에너지 문제가 정치 쟁점화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 이념화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며 정부의 악의적 발표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신 의원은 “원전을 문제인 정부가 완전히 없애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원전의 안전성과 폐기물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이 석탄발전에서 원전으로 가는 것은 안전성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원전을 하더라도 안전을 전제로 한 원전 발전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념화해 이용한 것은 윤 정부임을 명확히 했다. 더불어 신 의원은 우선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태양광 운영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바로 잡았다. “작년 9월 문재인 정부에서 226개 전체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실시



한 전수조사 결과를 최근에 발표한 것”이라며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을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부당 집행사례가 총 2,267건, 2,61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지자체 적발실적을 12개 지자체에서 일어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서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새만금 사업에 대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최초로 지정된 스마트 그린 국가시험산업단지”라며 “문재인 정부 때,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담판을 짓고 새만금 발전을 가시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한 RE100 사업 단지로, 향후에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상품을 만들지 못하면 수출을 못한다”며 “재생에너지가 선택

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 산업의 미래가 달린 문제로, 대한민국에 새만금 지역밖에 RE100단지 없이 기업이 찾아오고, 전북도는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새만금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새만금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임기 내에 마무리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어제 정부가 발표한 45만 톤 규모의 쌀 시장 격리 결정에 대해 우선 환경의 뜻을 밝히고 “민주당에서는 추석 이전에 시장 격리를 요구했던 것인데 늦어진 것은 아쉽다”며, “전략적물자불체 예산 720억 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논타작물 재배, 논 이모작 직불제’였다”며 “결국 당시 1966억 원인 예산이 720억 원으로 삭감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논밭갈 게 아니라 쌀값 안정을 위해 민주당 정권 7대 핵심 입법인 양곡관리법을 정부 여당은 전향적으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이 지난 23일 부안군 행안면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휴먼호프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신소득작물 재배 농부에게 필요한 정책은?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부안 정착 ‘흙’ 재배 농업인 만나 농업·농촌 잠재력 극대화, 소멸우려 농촌에 세심한 지원 약속

신소득작물 재배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의 필요성을 알리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이 지난 23일 부안군 행안면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휴먼호프를 방문해 박상훈 대표와 부안군 및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신소득작물 농부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박상훈 대표는 “2012년 고향에 귀농한 뒤 국내최초로 종자를 발아해 맥주의 원료인 국내 홉(HOP)재배에 성공했다”며 “하지만 홉과 같은 신소득작물의 경우 수확에 필요한 장비가 농기계 등 특이한 면이 있어서 살 때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등 진입장벽이

높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10년동안 수십억원을 들여 연구하고 재배한 세계수준의 홉을 원료로 생산한 맥주를 미국과 네델란드 등에 수출 하게 됐다”며 “전북청년과 귀농인이 농업과 신소득작물 재배에 자신감 있게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개발 및 투자자금 지원, 장비구입 등에 세심한 배려를 해 달라”고 덧붙였다. 홉만호프는 생산한 ‘홉’ 원료를 맥주양조와 음료는 물론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천연의약품 등 바이오 소재 개발까지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금 우리 농촌은 소멸의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따라서 농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 시키는데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농업과 신소득작물에 자신 있게 도전 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 면 농촌소득 증대와 인구유입 등의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며 “고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경감과 재배시설 집단화 및 6차산업 등을 통해 소득과 경영이 안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의회에서도 세심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신소득작물의 경우 재배단지가 어느 정도 규모화 되어야 경관농업과 체험시설 활성화 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다”며 “신소득작물에 미래의 젊은 인재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찾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부안=김석진 기자

“국내산 탈 쓴 일본산 수산물 4년새 급증”

민주 윤준병 의원,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제 업체 점검율 4.4%… 정부, 개선책 마련을”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최종 승인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수산물 전체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했다 적발된 건수가 4년간 9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 또는 타 국가 수산물로 거짓(허위) 표시했다 적발된 사례는 4년간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산물에 대한 국민 먹거리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산 거짓 표시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유통·판매되다 적발된 건수는 204건(품목 기준)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국내산 또는 국내산 포함 이중표기)으로 둔갑했다 적발된 사례는 188건으로 위



반사례 10건 중 9건에 달했고, 2018년 9건 대비 2021년 83건으로 4년간 9.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러시아산 11건(5.4%), 중국산 4건(2.0%), 국내산 미포함 이중표시 3건(1.5%) 순으로 거짓표시가 많았다. 일본산 수산물을 거짓 표시했다 적발된 업체별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산 수산물을 거짓 표시한 업체 적발건수는 193건에 달했고, 이 중 146건(75.6%)은 검찰 송치, 33건(17.1%)은 고발 14건(7.3%)은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본산 수산물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 적발된 건수(업체 기준)는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총 550건이었으며, 거짓표시 193건(35.1%), 미표시 357(64.9%)로 거짓표

시보다 미표시 등으로 인해 적발된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08년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시장 교란 행위 방지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제 제도를 도입했지만, 올 8월 기준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제 참여 업체 대비 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점검율은 4.4%로 매우 낮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근절 및 유통이력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일본산 수산물과 국내산 간 가격 차이로 인한 이윤을 노린 경우뿐만 아니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의 우려에 거짓표시하는 경우도 많지만 정작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제 업체 점검율은 4.4%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정부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투명한 이력관리 및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에 앞장 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성주류화제도 실행주체 역량 강화

‘전북지역 성주류화네트워크 구축 포럼’ 개최

여성가족부 지정 전북거점형양평등센터(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는 2022 전북지역 성주류화네트워크 구축 포럼을 지난 23일 고창군청에서 고창군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성주류화제도의 실행주체 역량 강화(성인지역·성평등의식 제고 등) 및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성평등한 지역사회 환경조성과 실질적인 성주류화 실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한국 성인지예산 네트워크 백희정 공동대표는 ‘성인지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성인지예산제도의 기능, 다른 지역의 성인지예산 우수 운영 사례와 예·결산 현황분석을 토대로 고창군 성인지예산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요 과제들을 제안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대전·세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 양성숙 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고창군의회 조민규 산업건설위원장 오세환 의원, 고창군 기획예산실 정광진 예산팀장 인재양성과 오수목 여성정책팀장, 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 김현숙 컨설턴트가 앞서 발표한 주제에 대한 고창군의 성인지예산 실행성 제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경수 기자·고창=김영식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축! 전주매일 창간

농업인·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이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100년 농협

삼례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강신학

- 전주완주시군지부 지부장 송혁
- 구이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안광욱
- 용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정완철

- 북전주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이우광
- 봉동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윤희
- 운주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윤여설

- 전주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임인규
- 상관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이재욱
- 이서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송영욱

- 고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국영석
- 소양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유해광
- 화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종채

- 전주원에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우철
-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김창수